

KWDI

해외통신

2021년 1월 (2021.1.1 ~ 1.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프랑스 FRANCE

프랑스, 유급 부성휴가 14일에서 28일로 확대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2020년 9월, 프랑스의 엠마뉴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자녀 출산 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부성휴가를 28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14일에 비해 무려 2배 늘어난 기간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 2002년 도입되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랑스의 부성휴가는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출산휴가 3일, 태어난 자녀를 돌보기 위한 부성휴가 11일(달력상 연속 11일, 주말 및 공휴일 포함)로 총 14일을 사용할 수 있다. 3일의 출산휴가와 11일의 부성휴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11일의 부성휴가는 자녀가 태어난 뒤 4개월 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태어난 자녀가 신생아 병동에 입원해야 하면 이와 별도로 최대 30일(달력상 연속 30일, 주말 포함)을 신청할 수 있다.
- 현재 부성휴가는 피고용자라면 제도상의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직이나 정규직과 같이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정 요건이란 휴가 시작 최소 한 달 전에는 고용주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점, 휴가 사용 시작일 기준 최소 10개월간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 휴가 사용 시작일 이전 3개월간 총 최소 150시간 근무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일단 피고용자가 부성휴가를 신청하면, 고용주는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계약 근로자의 경우, 남성이 부성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고용계약 기간은 연장된다. 고용주는 휴가와 관계없이 업무 이행에 있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부성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여성의 출산휴가와 남성의 부성휴가 수당은 휴가 사용 시점에서 과거 3개월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프랑스 국가 건강보험기금(Caisse Primaire d'Assurances Maladie, CPAM)이 개인별 상황에 따라 일일 부성휴가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휴가 시작일에서 지난 3개월 세전 소득이 기준이 되며 지급 수당액이 일 최소 9.63유로(한화 약 12,800원)에서 최대 89.03유로(한화 약 11만 9천원)로 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Government(2021.1.13.), "Allonger le congé paternité : une nouvelle avancée pour mieux accompagner les premiers jours de l'enfant(Extending paternity leave: a new step forward to better support the child's first days)", <https://www.gouvernement.fr/les-actions-du-gouvernement/sante-famille-handicap/allonger-le-conge-paternite-une-nouvelle-avancee> (접속일: 2021.1.22.)
- Library of Congress(2020.12.9.), the United States, "France: Parliament Approves Extension of Paternity Leave". [https://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france-parliament-approves-extension-of-paternity-leave/#:~:text=\(Dec.,days%2C%20including%20seven%20mandatory%20days.&text=Furthermore%2C%20adoptive%20fathers%20will%20be%20eligible%20for%20paternity%20leave%20as%20well](https://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france-parliament-approves-extension-of-paternity-leave/#:~:text=(Dec.,days%2C%20including%20seven%20mandatory%20days.&text=Furthermore%2C%20adoptive%20fathers%20will%20be%20eligible%20for%20paternity%20leave%20as%20well) (접속일: 2021.1.22.)

- 이처럼 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남성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수립되고, 이행되고 있었으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로서 쓸 수 있는 휴가가 총 14일뿐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 프랑스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자녀와 부모가 중요한 유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함께하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 14일 부성휴가는 매우 짧았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조직하여 출산 후 자녀의 첫 1,000일간에 대해 연구를 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위원회는 9주간의 부성휴가를 마크롱 대통령에게 제언했다. 이후 정책 변화로 인한 현실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프랑스 정부는 14일에서 28일로 유급 부성휴가 제도를 개정하기로 했다.
- 프랑스 정부는 확대된 부성휴가 제도 이행으로 자녀들이 태어나고 중요한 첫 1,000일 동안 부모가 최대한 함께하면서 보다 나은 발달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고, 남녀가 더욱 동등하게 자녀 육아 부담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현재 프랑스에서는 여성은 출산일 전 6주, 출산 후 10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출산 전후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2~4주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최소 8주는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되어있다. 여성의 출산휴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 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기존의 프랑스 노동법(Labor Code) 수정이 필요했으며, 수정안은 프랑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프랑스 의회는 2021년 사회보장 기금 예산안에 28일로 확대된 유급 부성휴가 정책도 포함했다.
- 새로 실시되는 유급 부성휴가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급 부성휴가 7일은 의무로 무조건 이행되어야 한다. 7월부터 시행되는 부성휴가 제도에서 주어지는 28일 휴가 일수를 여러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7일 유급 부성휴가를 거부하는 기업은 최대 7,500유로(한화 약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사회보장제도에서 최대 32일 부성휴가를 허용한다. 입양을 통해 자녀가 생길 때에도 동일한 유급 부성휴가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이제까지 시행된 유급 부성휴가 일수를 고려하면 이번 정책으로 유급 부성휴가가 2배나 확대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7월 이후 새로운 부성휴가가 도입된 뒤, 아버지가 된 남성들이 실제로 최대 28일의 휴가를 사용하는지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Service-Public(2020.6.22.),
“Congé de paternité et d'accueil
de l'enfant d'un salarié du secteur
privé(Paternity and foster leave
for the child of a private sector
employee)”,
[https://www.service-public.fr/
particuliers/vosdroits/F3156](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156)
(접속일: 2021.1.19.)

- The Guardian(2020.9.23.),
“France doubles paid paternity leave
to 28 days”,
[https://www.theguardian.com/
world/2020/sep/23/france-
doubles-paid-paternity-leave-to-
28-days](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sep/23/france-doubles-paid-paternity-leave-to-28-days)
(접속일: 2021.1.22.)




유럽, 디지털 연구 및 기기 설계 단계에 젠더·다양성 관점 필요

체 헤 원 독일통신원

- 지능형 개인 비서 기능을 하는 애플의 음성인식서비스 시리(Siri)와 아마존의 알렉사(Alexa) 등 디지털 비서 기능 장치와 가정용 로봇이 전통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하고 있다는 전문가들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장치들은 식료품을 주문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집안의 조명을 끌 수 있다. 일본의 디지털 음성 비서 히카리 아즈마(Hikari Azuma)는 낮 동안 마스터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 섹스 로봇으로 만들어진 록시(Roxy)도 여러 종류의 집안일을 한다. 여성화된 AI 장치와 로봇 및 스마트 장치는 친절하고 효율적이며 사용자가 원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내에게 맡겨져 온 가정적 책임을 지는 '아내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 장치의 출현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들은 남성 지배적인 산업에서 설계된 가상도우미로, 과거 주부이자 백인, 중산층, 이성애 중심 문화 등을 모두 담고 있다.
- 독일 언론은 최근 발간된 <The Smart Wife>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비서 기능 장치의 성별 고정관념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호주 모나시 대학의 Yolande Strengers 교수와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의 Jenny Kennedy 박사는 함께 펴낸 책 <The Smart Wife>에서 시리나 알렉스 등 스마트 홈 장치에 페미니스트 리부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와이프'는 전통적으로 아내에게 맡겨져 왔던 가정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인공 지능 또는 로봇 사물을 뜻한다. 2021년부터 유럽 과학기술 분야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는 지원자와 평가자가 젠더 관점을 다루고 평가해야 하는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 'The Smart Wife' 연구진은 이러한 기기의 디자인이 구식이며 과거 성별 고정관념을 다시 새겨 넣어 성평등을 후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기기들은 여성 형태를 띠고 있으며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전통적인 여성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 많은 이들이 기기를 이용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며 이는 상업적 전략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전히 여성이 가사 일을 수행하지만, 남성이 주로 가정용 디지털 기기를 관리하고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 연구진이 말하는 디지털 장치에 대한 페미니스트 리부트는 장치를 이성애 중심의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재설계하는 일이다.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의 젠더 감수성과 다양성을 향상하고, 장치에 숨겨진 고정관념을 드러내기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이들은 기계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방법으로 성격이나 개성을 만들어내는지 들여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 여성 형태를 띠고 있는 기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우리는 종종 이런 디지털 기기를 만드는 회사보다 여성 형태를 띠고 있는 장치를 비난하는 방식과 그것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참고자료

- The European Commission(2019.9.6), "How should gender be addressed and evaluated in Horizon 2020 proposals?",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portal/screen/support/faq/977> (접속일: 2021.1.19.)
- ZDNET(2020.11.3), "The Smart Wife, book review: A feminist take on smart home tech", <https://www.zdnet.com/article/the-smart-wife-book-review-a-feminist-take-on-smart-home-tech/> (접속일: 2021.1.19.)
- DW(2020.12.17), "The Smart Wife: Is your home voice assistant sexist?", <https://www.dw.com/en/the-smart-wife-is-your-home-voice-assistant-sexist/a-55970209> (접속일: 2021.1.20.)

 ‘The Smart Wife’연구진의 페미니스트 리부트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유럽연합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의 새로운 정책이 있다. 유럽연합위원회의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 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자와 평가자에게 새로운 요건으로 ‘젠더 차원에서의 고려’를 도입한 것이다. Horizon Europe는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창출, 국제 교류 확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위원회의 마리아 가브리엘은 위원회 발표 자료에서 “연구와 혁신 분야에서 성별과 젠더 기반 분석이 이뤄지고 인종과 연령, 장애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우수한 연구를 생산하는데 주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성별 및 젠더 차원에서 분석이 요구되는 연구 영역은 건강, 도시 계획, 기후 변화, AI와 얼굴 인식, 가상 비서 및 소셜 로봇 등이다. 그렇다면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서 지원자와 평가자는 어떻게 젠더 관점을 다루고 평가해야 하는가. 이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및 혁신 콘텐츠에서의 젠더 관점

- 연구 결과가 여성과 남성 그룹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 주제는 젠더와 관련된 연구 작업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펀딩 지원자는 성별 또는 젠더와 관련한 특정 작업을 제안서 일부에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자는 제안서에서 성별 및 젠더 분석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영향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연구 및 혁신 활동’과 ‘혁신 활동’ 분야 평가 하위 기준에 ‘젠더 차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평가자는 연구 및 혁신 콘텐츠의 우수성 평가를 할 때 젠더 관점에서 이를 고려해 평가한다.

• 연구팀의 성별 균형

- Horizon Europe은 지원자에게 작업 과정에 있는 연구 및 혁신팀 내에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장려하고 특히 남녀의 균형 잡힌 참여가 보장되도록 관리 구조 형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른 요인과 함께 ‘성별 균형’은 각 기준에서 동일한 점수를 가진 제안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일한 점수를 가진 제안서가 작업 프로그램 범위 또는 할당된 예산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컨소시엄팀의 ‘성별 균형’을 따져 순위를 매긴다. 여기서 지원자는 제안된 연구와 혁신 활동을 수행할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성별을 지정해야 한다.

• 무의식적인 젠더 편향 방지

- 성별 고정관념은 여성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와 같은 무의식적인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전문가가는 평가 과정에서 무의식적인 성별 편견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모든 제안서는 지원자의 출신, 정체성 및 성별 등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평가된다.

유럽연합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The Smart Wife' 연구진은 중요한 새 조치이며, 디지털 산업 분야 외에도 보건, 기후, 에너지, 혁신 등 모든 분야에 젠더뿐만 아니라 다양성 관점을 고려하는 제도가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제품을 설계할 때도 이미 기기를 구축한 다음 젠더와 다양성 관련 팀이 참여하여 수정 및 변경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양성과 젠더 관점으로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사용 중인 장치에 한해서는 사용자에게 설계 디자인 과정을 알려주고 그들이 어떤 종류의 표현(예를 들어 목소리)을 사용할 것인지 검증하는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재부팅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가정폭력 피해자, 약국에서 '암호' 사용해 도움 요청한다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영국 정부는 2021년 1월 14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약국에서 암호를 사용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 영국에서 코로나19로 전국 봉쇄령이 내려진 뒤 가정폭력 피해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가정폭력 의심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자 영국 정부가 피해자 지원단체의 목소리를 수용해 해당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영국 전역 2,855개 약국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용할 암호는 'ANI'다. 만약 누군가 약국 직원에게 ANI라는 암호를 사용하면 약국 직원이 도움을 청한 사람을 약국 상담실과 같은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눈 뒤 경찰이나 피해자 지원단체 등으로 연결한다. 전국 모든 약국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은 'The Ask for ANI'라는 정책에 참여한 약국에서만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월 14일 기준으로 영국의 약국 체인점인 Boots 2,300곳, 개인 약국 255곳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현재 영국 정부가 온라인으로 정책에 참여할 약국을 추가 모집하고 있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네 약국을 가정폭력 피해 신고 거점이 된 것은 약국의 접근성 때문이다. 약국 체인점인 Boots는 약뿐 아니라 간단한 식료품, 생필품, 화장품 등을 모두 판매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편의점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편의점처럼 동네 곳곳에 있어 피해자들이 접근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 정부는 약국 안에는 정책 홍보 자료를 배치하고, 밖에는 'Ask for ANI 참여 약국'이라고 별도로 표시해 피해자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약국이나 슈퍼마켓 같은 시설을 가정폭력 피해자 신고 거점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단체 쪽에서 먼저 나왔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위기 아동 등을 돕는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Hestia는 지난해 'Safe Spaces'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영국의 유명 약국 체인점인 Boots, Superdrug, Morrisons과 협업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약국 상담실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 정부의 Ask for ANI와 비슷하다.

참고자료

- GOV.UK(2021.1.14.),
"Pharmacies launch codeword scheme to offer lifeline to domestic abuse victims",
<https://www.gov.uk/government/news/pharmacies-launch-codeword-scheme-to-offer-lifeline-to-domestic-abuse-victims>
(접속일: 2021.1.20.)
- GOV.UK(2021.5.21.),
"New measures announced ahead of hidden harms summit",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measures-announced-ahead-of-hidden-harms-summit>
(접속일: 2021.1.20.)
- UK Parliament(2020.4.14.),
"Impact of Covid-19 (Coronavirus) on domestic and child abuse examined",
<https://committees.parliament.uk/work/184/home-office-preparedness-for-covid19-coronavirus/news/114837/impact-of-covid19-coronavirus-on-domestic-and-child-abuse-examined/>
(접속일: 2021.1.20.)

민간에서 시행되던 프로그램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해 4월부터다. 지난해 4월, 영국에서 영국 봉쇄령 내려진 뒤 3주 만에 여성 16명이 가정폭력이 숨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코로나 19와 가정폭력의 연관성이 알려졌고, 같은 달 열린 영국 내무성 특별위원회 화상회의에서 약국이나 슈퍼마켓에서 암호를 사용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다. 데임 베라 바일드 영국 웨일스 가정폭력 피해자 경찰 국장은 회의에서 “슈퍼마켓 직원과 가정폭력 피해자가 그들끼리만 아는 비밀 코드를 만들어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였고, 지난해 5월 21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주재한 화상 회의인 ‘Hidden Harms Summit’에서 정책의 윤곽이 잡혔다. 이 회의는 코로나 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존슨 총리를 비롯해 국가범죄국(National Crime Agency), 국가경찰청장협의회(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 아동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이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영국 정부는 전국약국연합(the National Pharmacy Association), 영국소매협회(British Retail Consortium)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가 협업해 ASK for ANI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영국 정부는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 200만 파운드(한화 약 31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 Home Office(2021.1.14.),
“Police Powers: Pre-charge Bail
Government Respons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51847/2020-01-14_Response_to_PCB_consultation.pdf
(접속일: 2021.1.20.)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가해자의 보석 기준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더 힘쓰기로 했다. 영국 내무성은 1월 14일, ‘기소 전 보석에 대한 정부 입장(Police Powers: Pre-charge Bail Government Response)’라는 보고서를 통해 The Ask for ANI 정책과 함께 기소 전 보석(pre-charge bail)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영국에서 경찰 보석(police bail)이라고 더 잘 알려진 기소 전 보석이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경찰이 체포한 뒤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나 수사 자료가 없어 더 구치소에 수감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럴 경우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풀어줘야 해 피의자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위협하거나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법의 허점이 존재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폭력,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피해자나 증인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보석 기준과 절차를 더 강화된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Ask for ANI 정책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고, 기소 전 보석 제도를 개선해 가정폭력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다른 시민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두 정책의 의미를 설명했다.